

청목회 수사 뇌물사건으로 번지나

검찰, 일부 의원실 후원금 기부 요구 정황 포착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뇌물사건'으로 본격 비화할지 주목된다.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한 후원금이라는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됐는데, 검찰은 법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후원금'을 놓고 의원실과 청목회 간에 '미심쩍은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의원실에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청목회장 최모(구속)씨는 두달 뒤인 같은 해 9월 열린 개정안 공청회가 끝난 직후 "법상에 어떤 음식을 차려놔야 하는지, 밥상에 초대해야 할 분들에게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 시기 다른 의원이 지역구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청목회 지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목회는 지난해 9~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청원경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 만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청목회 간부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 33명 이상의 후원회계좌를 추적해 청목회가 지난해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2억7000만원을 1000여 개의 비회원 차명계좌로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500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회비 5억여원 중 상당부분이 후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를 뒷받침할 일부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역 후원회 사무실은 한 직원이 지난해 500

만원 이상의 문כת돈을 청목회 간부로부터 전달받았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드러났다. 또 한나라당 장재원 의원의 후원회계좌로는 100만원 이상의 문כת돈이 수차례 입금됐다가 이를 의원실 측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면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정치인이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자금법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이라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8일부터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할 방침이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남뉴스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페스티벌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이후 첫 이벤트인 '2010 코리아 모터스포츠 그랜드페스티벌'이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모두 4개 분야에 90여대의 경주용 차량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본금 바닥난 KAVO, 임원들 연봉은 역대

"임금 조정 등 조직·운영구조 개편 시급" 목소리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 임원들이 자본금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역대가 넘는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KAVO는 2008년 지분구조를 개편하면서 당시 100억원대에 불과했던 자본금을 6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분구조 개편 전 카보의 대주주는 F1대회 개최권을 갖고 있던 MBH(엠브릿지홀딩스)사였으나 개편 이후 전남도·전남개발공사(263억원·43.83%)와 SK건설(148억원·24.67%), MBH(102억·17.00%), 신한은행(40억원·6.67%), 농협(40억원·6.67%), 광

주은행(7억원·1.17%) 등이 투자하면서 자본금은 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보 자본금은 그러나 대부분 경주장 연약지반처리 공사의 밀린 대금으로 지난해 초 400억원이 지급됐고 각종 경성비와 인허가 비용으로 150억원이 지급되면서 50여억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잔여 자본금도 그동안 10여명에서 40여명으로 늘어난 카보 임직원의 임금 등으로 지출되면서 추가 출자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각이 우세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보 임직원들은 역대가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 3명과 이들이 겸직 또는 별도로 임명한 기획마케팅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건설본부장, 재무본부장 등은 모두 연봉과 수당을 합쳐 각자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으며 정영조 카보 대표는 2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장 아래 팀장 7명의 연봉과 수당 등도 각자 65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임금에 비해 카보의 대회 준비와 운영은 수준 이하인데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임금 조정은 물론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청목회 불뚱...정치권 후원금 모금 울스톱

검찰 수사 항방 촉각... '소액 후원금제' 개정 논의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여·야 현역의원 11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 바짝 긴장하면서 향후 수사방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후원금 모금 활동 시기를 저물질하고 있다. 특히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후원금 모금 '개정 휴업' = 7일 각 정당에 따르면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각 국회의원들은 개인이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 등을 보내면서 활발히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벌일 시점이지만,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부분 적극적인 유치는 염두를 내지 못하고 속 앓이만 하고 있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검찰

의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국회 내 정치후원금 모금 분위기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괜한 오해가 없도록 정치후원금 모금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회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000여 장의 후원 안내카드를 인쇄했지만, 아직 발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국감이 끝난 뒤 보내려고 했으나 청목회 문제가 커지면서 발송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2~3주 정도 계속될 경우 울해는 예년 모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후원금 '손질' 논의 = 이번 기회에 '소액 후원금제'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줘 '다수의 소액후원금'을 활성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에 의해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원금 10만 원 이하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에서 9만9000원까지 후원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로비가 필요한 기업과 이익단체가 직원이나 회원 등을 동원해 문כת돈을 1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쪼개서 후원하는 편법을 쓸 경우 결국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한 부정한 돈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8일 최고위원회에서 '소액 후원금제'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긴급 당 5인 회의에서 "소액 후원금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 정치제도개혁특위에서 후원금제에 대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액 다수 후원금" 정산에 따라 투명해진 회계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정치자금법에서 후원금제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베트남 하노이서 '쌀 올림픽'

8~12일 전세계 1만5000명 참석 본보 송기동 기자 파견 현지 취재

'쌀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0 세계 쌀회의'(International Rice Congress)가 베트남 하노이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다.

지난 2002년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인의 생명을 지켜온 쌀의 가치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래 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베트남 농업부가 공동 주최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쌀'을 주제로 전세계의 쌀 과학자와 농업인·정책결정자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다.

필리핀에 본부를 둔 IRRI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을 가져온 통일벼를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국 베이징(2002년)·인도 뉴델리(2006년)에 이어 IRRI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신 쌀연구 주제발표를 하는 '28차 쌀연구컨퍼런스'를 비롯해 ▲ 국제 쌀정책과 투자, 쌀 무역 분석 등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 쌀정책·투자 컨퍼런스' ▲ 쌀 가공상품과 관련 기계를 전시하는 '쌀 기술·문화 엑스포' ▲ 쌀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 ▲ IRRI 50주년 기념행사 등 5개

메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식량작물학과) 교수가 참가해 광주 지역업체인 금강(주)에서 개발, 국제적인 호평을 받은 농기계 '복토직파기'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금강(주)에서 제작한 '복토직파기'는 올해 IRRI와 베트남 농업과학원의 현지 실증시험결과 생산량 9%증가, 작업량 60~75% 절감, 수의 18%증대 등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일보사는 제3차 '세계 쌀회의'에 사회부 송기동(사진) 기자를 파견해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seoulsummit.kr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만들고 지구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중심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